

5·18기념재단과 기념사업의 변화를 촉구하며

의정대상

정다운

광주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 회기가 마무리됐다. 5·18기념재단의 사업예산이 삭감되거나 부활했고 그로 인해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여러 단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사실 필자는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이 요구한 2024년도 5·18관련 예산을 고통스럽게 심의했다.

윤석열정부의 세수예측 실패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내년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작년 5월 5명의 청년의원이 한 목소리로 지역사회에 요청한 오월문제 해결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런 상황에서 23명의 광주광역시의원 중 1명에 불과한 필자가 마치 전문가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저기 나서서 5·18이라는 거대한 이슈를 독점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는 것도 즐겁지 않았다. 오월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고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못 본 척하고, 나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기대를 품기에는 오늘날 광주 오월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다. 그것이 필자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월예산을 삭감하고 지역 내에서 비난을 자초한 이유이다.

작년 말 필자는 수십 년 동안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오월예산을 삭감하고 오월단체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 무렵 필자는 오월예산을 다뤄본 경험이 분명히 오월광주의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번 예산심의 상황은 필자의 기대와는 달랐다.

작년부터 문제점이 지적된 5·18사업들이 1년이 넘도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내년 예산을 결정할 지금까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시가 직영으로 하는 사업도 그렇지만 5·18기념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 5·18기념재단의 예산서를 마주하니,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그런데 5·18예산 심의 며칠 전, 국비가 전년 대비 크게 삭감되었으니 시비를 추가로 증액해달라는 재단관계자의 연락을 받았다.

이런 연락을 받은 것은 필자 이외에도 몇몇의 의원이 더 있었다. 필자는 재단이 요구하는 시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국비만으로 불충분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단에 세부사업명세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 때까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고, 재단의 업무파트너인 광주광역시 5·18민주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니 맥이 풀렸다.

5·18민주화운동의 근본된 정신은 부당한 권력에 대한 항거와 저항이다.

하지만 그간 5·18기념재단에 의해 진행되는 5·18관련 사업 중 몇몇은 5·18정신을 담지 못한 채 매년 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그쳤고, 이런 문제를 여러번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려를 무릅쓰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필자는 제대로 된 5·18기념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5·18을 위해 일하는 여러 단위들의 고른 역할 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5·18기념재단은 오월 단체와 시민사회의 소통 및 중재역할을 포함한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광주광역시와 의회는 오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중복사업 방지 등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하며, 5·18관계기관은 오월 정신의 계승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 활동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과정을 광주시민께 소상히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관련 조례상 광주광역시와 의회가 사적결합체인 5·18기념재단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그들의 사무에 접근하기 어렵다. 어찌 보면 기념재단의 이러한 관행적인 사업추진, 조직 유지를 최우선시하는 운영의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5·18기념재단에 관한 제도와 규정에 한계가 있더라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5·18기념재단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 설립됐다는 것이다.

결국 광주시, 의회, 기념재단 모두 오월정신 계승을 위한 동반자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5·18을 왜곡하고 폄하한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되고 5·18관련 공약이 줄줄이 폐기될 때마다 광주시민과 의회, 광주시는 정부를 향해 항의했다. 하지만 기념재단은 정부 예산 확보를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잊은 모양새였다. 5·18기념재단은 이 역시 시비를 투입한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재단이 향후에도 본연의 공적역할을 다하지 않거나, 같은 사업비를 활용하여 더 좋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로 언론을 움직이고 동료의원들을 움직여 조직과 사업 유지에만 매진한다면, 필자는 내년도 내후년에도 올해와 같이 5·18기념재단의 예산을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광주광역시의회 5·18관련 사업 예산 삭감은 5·18기념재단이 행하는 숭고한 오월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향후 5·18에 대한 발전적인 담론을 재단 외부의 단위와 재단이 '함께' 형성하자는 뜻이라는 것을 5·18기념재단이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다.

5·18민주화운동의항구적인정신계승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

社說

벼랑 끝 내몰린 자영업자 빛 이대론 안돼

작년 1인당 평균 대출 1억8천

지난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이 1억 80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1년 전보다 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연체율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마저 어려운 지금, 빛에 눌린 자영업자의 한숨이 걱정스럽다.

2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액은 1억 7918만 원으로 전년(1억 7717만 원)보다 1.1%(201만 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평균 대출 증가율은 2019년 2.4%(372만 원)에서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5.4%(869만 원)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5.3%(887만 원) 늘었다. 용도별로는 사업자대출이 6.2%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4.2% 감소했다. 고금리로 은행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한 것도 문제다.

연체액과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연체율은 0.37%로 전년에 비해 0.05% 포인트 높아졌다. 자영업자 연체율이 증가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전년에 비해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 없이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비은행(0.10%p) 연체율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졌고, 이자부담이 더 큰 비은행권 연체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내년 경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시한폭탄으로 남겨진 자영업자의 채무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하루 빨리 내놔야 한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자영업자다. 고금리 시기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의 빛을 방지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은 자명하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한숨소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응답할 수 없는 재판 지연에 서면 구형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힘써야

‘재판 지연’으로 논란이 됐던 광주 지방법원의 A씨(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제시해 지역 사회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결심공판의 경우 검사의 의견진술과 함께 구두로 구형이 내려지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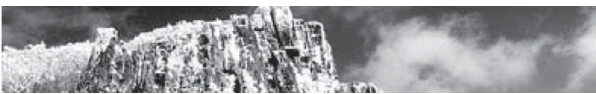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 심리로 지난 8일 A씨에 대한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극히 이례적으로 서면으로 구형의견을 냈다. A씨는 남구 주월동 재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로비 명목으로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수 십 여 차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지난 2020년 12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뜩이나 지난 2021년 2월 처음 열린 이 재판은 1심이 내년 2월 7일로 결정되면서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형사재판에서 서면 구형을 해도 형량의 차이는 없다. 다만 당사자들 외

에 형량을 알 수 없어 알권리 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지역 한 변호사는 “재판이 비밀리에 열린다면 공정한 판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서면 구형에 제동을 건 사례도 있다. 지난 2014년 11월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구형량을 서면으로 제출하려다가 재판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재판부는 “구형은 법정에서 구두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서 서면구형을 하게 된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비리를 저지른 정치·기업인 등이 재판을 늦추는 권력형 비리를 수없이 봐왔다. 권력자라는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늦춰서는 안되며 검찰 역시 서면 구형 등으로 알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회적 주목도가 높지 않은 A씨 재판에서는 더욱 응답할 수 없는 일이다.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A씨에게 또 다른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게 만들 것인가. 어떤 범죄자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사법부가 바로 서야 할 것이다.

◆ 서석대



1996년 겨울 어느 날,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 작은 술집 ‘동숭동에서’가 문을 열었다. 주인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송영길 당시 사법연수원생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이정우 변호사 등 200여 명. 80년대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8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공동으로 출자한 가게였다. 주로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도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겠다”는 공동의 목표, 어느 덧 ‘김세대’가 된 30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당시 경영을 전담했던 황도준의 설명이다.

고흥에서 태어난 송영길의 꿈은 ‘세상을 바꾸는 정치’였다. 30대의 나이,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난 386세대.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1980년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에 온몸으로 항거하는 것이었다. 영화 ‘서울의 봄’에 묘사된 것처럼 ‘화염병’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도덕적 가치도 지켜냈다. 송영길도 1984년 연세대 직선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화염병을 들며 만정부시위로 구속되는 등 민주화운동에 자신을 바쳤다.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그에게 1계급 특진과 5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릴 정도였다.

송영길의 몰락

정치권에서의 경력도 화려하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된 송영길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에 적극 참여했고, 2004년 17대 총선 이후에는 개혁세력의 선두주자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었다.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는 386세대가 줄줄이 낙선하는 상황에서 3선에 성공했다. 5선 국회의원과 민선 5기 인천시장, 제5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역임했다. 그야말로 광주·전남을 이끌어갈 차세대 정치인이면서 유력한 대권주자의 한사람이었다.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당내 금품 살포 등이 그가 받는 혐의들이다. 송영길은 문재인 정권에서 핵심 요직을 장악했던 386세대의 만행이면서 지난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저항하는 지식인으로 활동했던 대표주자였다. 여유와 너그름으로 따르는 후배도 많았다. 욕심 때문이었을까. 30대, 동숭동에서 맥주잔을 기울일 때면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걱정을 토로했던 송영길. 그의 몰락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 욱	논설실장 이 용 환	편집국장 박 성 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